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 9. 17. / (총 7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김 현 주	전 화	044-202-3410
담 당 자	신 하 늘		044-202-3429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 복지부-아동복지학회 공동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최 (9.17.)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7일(금) 오후 2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회장 김진석)와 공동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
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를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유튜브* 생방송을 병행하였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lNsR4M9KvA-a_fg

□ 이번 회의는 아동수당 수혜자와 아동복지정책 실무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자 3명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의
로 이루어졌다.



아동수당 수혜자, 아동보호 실무자 인터뷰 영상

- 우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이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탄탄한 기반을 만든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52명 배치 완료 ('21.9. 기준)

-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 ('21.3.)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성과가 있다고 보았다.

* ('17년) 57개소 → ('21년) 105개소

- 다만 여전히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방대한 문제가 있고, 아동보호 유형 중 가정위탁의 비율이 정체되어 있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가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강 교수는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아동의 복지 증진과 향후 아동이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가정 양육 부담 완화와 빈곤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아동수당은 '22년 추가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를 위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여 국회 제출
(예산(국비 기준) : (21년) 2조 2,219억 원 → (22년 정부안) 2조 4,040억 원)

- 다만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강지원 단장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강 단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하였으며,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추진해온 돌봄사업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전환하여 짧은 기간 내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2018년 신설 이후 누적)등 돌봄제공기관 신설·확충

** 마을돌봄 이용 아동 12만 명('17년)에서 14.1만 명('21년)으로 16.6% 증가, 초등 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4.3만 명 → ('21년) 44.2만 명

□ 정부는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이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붙임2 아동복지정책 성과 참조)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그간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 또한 “좌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요
2. 그 간의 아동복지정책 성과 (2017년 5월~)

붙임 1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요

□ 일 시 : 2021. 9. 17.(금) 14:00 ~16:30 (2시간 30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인원만 현장참석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유튜브 생방송 병행

□ 장 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4)

□ 참석대상

- (복지부) 제1차관,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장
- (발표자·토론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강지원 단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

□ 주요내용 및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0 (10분)	■ 제1차관 인사말 ■ 아동권리보장원장 인사말	
14:10~15:10 (60분)	■ 발표1 “아동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 및 과제”	김진석 교수
	■ 발표2 “가정의 아동양육비용 지원 - 아동수당 제도 도입 성과 및 과제”	강지영 교수
	■ 발표3 “차별없는 안전한 돌봄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성과 및 과제:”	강지원 단장
휴식 (15분)		
15:25~15:55 (30분)	지정토론 : 좌장 이봉주교수	
	■ 토론 1	이상정 부연구위원
	■ 토론 2	김형용 교수
	■ 토론 3	인구정책실장
15:55~16:25 (30분)	■ 토론 4	이미지 기자
	■ 질의응답 및 폐회	

붙임 2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년 5월~)

1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추진

□ 아동수당 최초 도입 및 확대

- (개요) ①18.9월 아동수당 최초 도입 (선별적 도입, 소득 하위 90%) 이후 ②19.4월 보편지급으로 확대(소득기준 폐지), ③19.9월 연령확대(6세→7세 미만) 등 제도 확대로 수혜 인원 증가* * ('18.9월) 195.1만명 → ('20.12월) 248만명
- '22년 추가 연령 확대(만8세 미만까지)를 위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여 국회 제출
- * 지급대상 : 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정부안)으로 확대,
예산(국비 기준) : (21년) 2조 2,219억원 → (22년 정부안) 2조 4,040억원
- (도입효과) 아동수당 수혜자 88.9%가 만족,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20. 리얼미터) *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0년) 88.9%
- 아동가구 가처분소득 증가(분기별 약 35만원 증),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 학령 전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70.8만원 ('20. 보사연 설문조사)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 (초 등 돌봄)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18.4~),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미이용자 대비 여성의 근로 참여 7.8%p↑, 평균근로시간 4.7시간↑('21.6, KDI)
- ** '20년 이용자만족도 조사 평균 9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예산 투입 및 공급 확대) '17~'21년 9,565억원 투입,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 신설('18년 이후 누적) 등 돌봄제공기관 확충
- * '21년 이후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이용자 확대) 마을돌봄 이용 아동 12만명('17년)에서 141만명('21)으로 16.6% 증가
-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4.3만명 → ('21년) 44.2만명

□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20.~)

- (의료비 경감)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 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2 아동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가 책임 강화

- (보호체계 공공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실시*, 시·군·구 중심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전국 구축 ('20.10.~)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인력확충)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배치 ('21.7. 기준)
- (기능 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 수행,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 추진

□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 '21년까지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21.7.1. 기준 539명 배치 완료)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조사의 책임성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고율·발견율 증가, ▲조사 순응도 제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기관화, 담당자 1인당 사례관리 수 축소 효과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19) 및 지원 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 개선

* 보호종료아동 자립률 ('17년) 79.4%→('20년) 81.1%/ 공공주거지원율 ('18년) 33.5%→('20년) 36.3%
*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률 ('16년) 52.0%→ ('20년) 70.4%

3 아동 정책 인프라 확충

- (아동권리보장원)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19.7.)
 - 입양,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자립지원 등 민간에서 분산 운영되던 8개 사업 중앙조직 통합, 아동정책 총괄 지원
- (아동학대 인프라)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 피해 대응 인프라 강화
 - 복권기금(기재부)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예산구조 일원화('21.6)
 -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범피기금) 예산 일반회계 이전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 ('17년) 60 → ('21년) 81개소 / ** ('17년) 57 → ('21년) 105개소